

3. 金收委의 短期 改革案 마련

- (개요) 금융개혁위원회에서 4월 8일 18개 단기 개혁안을 확정짓고, 5월말까지 중기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
- (주요 내용) 금융산업 개편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, 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, 금융저축 증대를 통한 금융 기반 마련 등임
- (파급 효과) 수요자 중심으로 금융질서가 개편될 것으로 보이고, 은행·증권·보험사의 업무 겸업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
- (평가) 개혁안 중 5대기업의 은행 비상임이사회 진출, 해외자금 조달, 금융 관행 해소 등은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

금융개혁위원회 18개 단기 개혁안 마련

- (개요)
  - 97년 1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개혁위원회에서 4월 8일 15차회의를 통해 18개 단기 개혁안을 확정함으로써, 금융개혁 방안 마련의 1단계 작업을 마무리함
  - 금개위는 18개 단기 개혁안을 마련한 후 곧바로 중앙은행 독립, 금융기관 신규진입 및 구조 조정,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등 중기 개혁 작업을 5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

금융산업 개편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, 금융시장 효율화, 건전한 금융기반 마련

- (주요 내용)
  -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융산업 개편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
    - 은행의 금융채 발행, 증권사의 기업어음(CP) 인수
    - 매매·중개, 종금사의 유가증권 매매 허용
    - 은행의 비상임이사중 주주대표로 5대 재벌 참여 가능
  -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
    - 금리·수수료 자유화: 저축성예금 금리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이자율을 연내 자유화, 증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상한 폐지
    - 여신관리제도 개선: 동일인 여신한도관리제를 폐

- 지하고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
- 해외금융 규제 완화: 해외증권 발행물량의 분기별 조정 폐지, 외화증권 발행한도 및 물량규제 완화, 상업차관의 도입조건 및 차입자격 규제 폐지
- 구속성 예금, 담보대출 등의 금융관행 개선
- 건전한 금융기반의 확립
  - 환율변동폭 확대나 완전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여 자본의 유입충격을 동화나 환율로 흡수
  - 비과세저축의 불입한도 확대로 금융저축 증대
- 한편 금융개혁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금융감독기관 통폐합,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중기 금융개혁 기초안을 5월 중으로 마련,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함

<금융개혁 단기 개혁안>

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</li> <li>-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</li> <li>- 서민금융기관의 체제 개선</li> </ul>
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리 및 수수료 자율화</li> <li>- 여신관리제도 개선</li> <li>- 해외금융 규제 완화</li> <li>- 벤처금융 활성화</li> <li>- 중소기업금융 활성화</li> <li>- 금융관행 개선</li> <li>-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</li> <li>- 금융 규제 완화의 실질적 정착</li> <li>- 금융행정기능의 효율화</li> <li>- 금융기관 내부 경영의 효율화</li> <li>- 금융전산망에의 접속 및 이용 확대</li> </ul>
건전한 금융기반의 확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화관리체계 및 운용방식의 개선</li> <li>- 금융저축 증대</li> <li>- 신용정보 유통 활성화</li> </ul>

금융기관 업무 장벽  
해소, 수요자 중심  
의 금융 질서 개편

○ (파급 효과)

- 수요자중심의 금융질서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됨
- 저축성예금의 금리자유화가 올해안에 실시되면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가 시중금리를 반영할 것임
- 증권거래수수료의 자유화로 증권사간에 수수료 인하경쟁이 벌어질 것이므로 증권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됨
- 은행, 보험, 증권사간 겸업화가 진행될 것임
- 세 업종간 업무 장벽이 낮아지면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구입하는 식의 '원스톱 금융거래'가 가능해짐

은행 비상임이사회  
참여, 금융 관행 개  
선이 당장 시행되기  
는 어려울 듯

○ (평가)

- 5대 기업 그룹의 은행비상임이사회 참여를 허용하려 하면서도 해당 은행에 대한 여신순위가 5위 안에 들지 않아야 하는 제약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사실상 참여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
- 기업의 해외자금조달과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행 통화량관리 중심의 통화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있어서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시중 통화량을 잠식하는 효과가 있어서 국내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음
-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건인 부실채권 해소 방안이 다소 미흡
  - 증자나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 등 구체적인 부실채권 해소 방안이 필요
  - 정리해고와 부실채권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금융기관간 인수합병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것임
- 구속성 예금이나 담보대출 등 금융계의 관행을 단기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 것임
  - 꺾기 관행은 대출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없어진 뒤, 담보대출 관행은 정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진 뒤에나 개선될 것으로 보임 (김도균)